전범기업 자산 매각 절차 임박…광주로 쏠린 눈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5명
10년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 제소
2018년 대법 손배 책임 판결에도
미쓰비시 배상 거부하며 지연
올 가을 현금화 결정 최종 판가름
한일 외교당국 당혹 속 주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13일 전교조광주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미쓰비시중공업측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본 전쟁범죄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 절차가 임박하면서 한일 외교당국의 시선이 광주로 쏠리고 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위자료 지급을 미루다 결국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강제 매각당할 처지에 놓였는데, 이 사건의 원고가 바로 광주에 기반을 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소송지원을 받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현금화'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의 최종 결정 전 해법을 찾겠다고 공언했지만, 원고(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자산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피고로 하는 강제동원 관련 국내 손해배상 소송은 7월 12일 현재 확정판결을 포함해 모두 70건이다. 원고 승소 3건, 패소 1건 등 확정판결이 4건이고, 나머지 66건은 대법원과 항소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전범 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정한 판결 3건의 피고 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판결 4년이 되도록 배상명령 이행을 미루고 있다.

그중 한 건이 바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10년 전 미쓰비시중공업을 광주지법에 제소한 근로정신대 사건이다.

근로정신대 사건은 승소에 승소를 거듭하면서 원고에 대한 손배 책임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면서 대법원 결정에 의한 '자산 현금화'를 목전에 두게 됐다. 강제동원 손배 책임이 확정된 3건의 소송 가운데 '현금화 절차'라는 '결승점'에 가장 가깝게 다다른 소송이 바로 이 사건이다.

초유의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 절차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한일 외교 당국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쫓기듯 '제3자에 의한 대위 변제'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도 어떻게든 전범 기업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기업이 불복을 거듭하면서 제소 6년 1개월 만인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자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승소 판결 2개월 만인 2019년 1월 김중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은 원고 4명은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그해 3월 받아들여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서 소유 중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 대상이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사실상 소송을 통한 지연 작전을 폈다. 법원의 압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한 것이다.

마침내 대법원은 2021년 9월 양금덕 할머니(상표권 2건)와 김성주 할머니(특허권 2건)가 신청한 압류 명령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근거로 대전지법은 피고 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특별현금화 명령)까지 내렸다. 일제강제동원 사건 관련 전범기업 자산 매각명령은 사상 처음으로,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액은 각각 2억973만1276원이다. 2015년 6월 광주고법 선고 당시 배상 명령액 1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그 밖의 집행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에도 피고 기업은 불복하고 나섰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손을 들어 준 2021년 9월 대전지법의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항고하더니, 대전지법 항고심에 지고서도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범 기업 자산 매각을 통한 특별 현금화는 올 가을로 예상되는 대법원 결정으로 최종 판가름 난다. 8번의 승소 뒤 마지막 한 번의 재판을 남겨둔 것이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공동대표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행위를 감싸고 도레 한국 정부에 목청을 높이는 일본 정부를 보면 일본 국민이 부러울 지경이다"며 "원고들이 9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첫 소송을 제기할 때 5명이었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원고는 그사이 김중곤·이동련·박해옥씨가 사망하면서 양금덕(94)·김성주(94) 할머니만 남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서 첫 소송…8번 패소에도 미쓰비시 '불복의 연속'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10년 보니

2010년 미쓰비시 협상테이블에
16차례 교섭에도 직접배상 거부
정부도 문제 제대로 풀지 못해
피해자들 2012년 개별소송 나서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10852.

이르면 올 가을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한국 내 자산 현금화 결정'의 시발점이 된 첫 소송의 사건번호로, 시작은 광주였다.

2012년 10월 24일 양금덕 할머니 등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수년에 걸친 소송을 거듭하면서 한일 양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 아니라 한국 사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피고 기업의 불복의 연속이었다.

광주지법 1심 승소(2013년 11월), 광주고법 항소심 승소(2015년 6월), 대법원 최종심 승소(2018년 11월)를 통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 책임)'이 확정됐다.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이 이어졌다.

원고 신청에 따른 대전지법의 압류 명령(2019년 3월), 대전지법 항고심 압류 명령 유지 결정(2021년 2·3월), 대법원(2021년 9월)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위한 전범 기업 한국 내 상표권·특허권 등 자산 압류가 확정됐다. 이어 압류 자산에 대한 대전지법의 특별 현금화 명령(자산 강제 매각) 인용(2021년 9월), 대전지법 항고심 현금화 명령 유지 결정(2022년 1·2월, 항고 기각)을 거쳐 마침내 대법원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범 기업을 광주 법정에 제소한 지 꼬박 10년 만이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1심 또는 항소심, 늦어도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불법행위(인권침해 등)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불복 절차를 거듭하면서 원고들은 모두 8차례 걸친 법원 소송을 전부 승소하고서야 전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이 사건 관련 거의 모든 소송에선 거대 로펌 '김앤장'이 전범 기업을 변호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복 77년에 이르도록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한일 관계 복원'을 표방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 대법원의 현금화 결정 전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기에 이른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완강하다.

2018년 11월 대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손배 책임 확정과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 이후 2019년 7월 '한국에 수출 규제 보복 조처'를 내린 데 이어, 최근 '현금화' 국면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합의로 모든 과거사 배상은 끝났다"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만들어 오라"며 전면에 나서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볼 뿐이다.

한국 법원은 줄곧 한일 양국 정부 합의만으로는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은 현재 '대법원 현금화 결정이라는 파국은 막자'며 다급해하고 있지만, 실은 소송전에 돌입하기 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낼 여지가 있었다.

1992년 8월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08년 11월 최종 패소한 이후, 2010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측과의 협상이 시작됐다. 2009년 10월~2010년 7월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철수를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일본에서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 한일 양국 시민사회에서 전범 기업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던 시기였다.

그리고 201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 후생연금 탈퇴 수당 '99엔'(2010년 당시 한화 1000원 수준) 지급 결정으로 국내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체불임금, 인권침해에 따른 사죄와 배상금 지급 대신 탈퇴 수당 99엔 지급이라는 상식 밖의 결정을 하면서 "그 문제는 이미 한일협정으로 처리됐다"고 한 것이다.

그 사이 2010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근로정신대 문제를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에 연락해왔다. 전범 기업 중에서 제1의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광복 65년 만에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으로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다.

하지만 양측은 2012년 7월까지 16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 직접 배상 방안은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2012년 5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5개월 뒤인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첫 제소가 이뤄지면서 10년간의 긴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매입형 유치원 사업 잡음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

경찰이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결국 백지화됐던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24일 경찰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2일 시교육청 행정예산과를 압수수색했다.

행정예산과는 지난 2021년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해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로, 경찰은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한 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 공무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일부 유치원 측에 흘려준 혐의를, 또다른 공무원은 유치원 측이 신청한 서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 관련 유치원 2곳의 대표자 등 2명과 민선 7기 광주시의회 의원 1명 등 모두 3명을 '뇌물' 관련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상상품 고수익" 47억 사기
2심서 징역 6년→3년 감형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3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회원을 모집해 상품 판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73명에게 4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국가를 가상상품(캐릭터)으로 발행해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상품을 3~5일간 보유한 회원이 12~18%의 수익률을 붙여 일명 '티켓'이라는 수수료를 지급한 일반 회원과 개인 간 거래(P2P)를 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들은 "거래 성사 후 고의로 미입금된 상품은 회사에서 전량 입금 후 소각한다"는 등 안정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2개월도 안 돼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래하면서 얻은 수익을 제외한 현실적인 피해액은 47억원의 3분의 1 미만인 점, 1심에서 40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남은 피해자 33명과도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야산 버섯 먹은 외국인 3명 중독

야산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외국인 3명이 중독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 됐다.

영암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숙박업소에서 40~50대 태국인 남녀 3명이 구토와 함께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산에서 캔 버섯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독이 든 버섯을 먹고 중독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58141	1	순천시 상인제길138-15, 102동 13층 1307호 60㎡	아파트	67,000,000 67,000,000	
2022타경50656	1	광양시 광장로84, 305동 9층 904호 [중동,성호아파트] 84.96㎡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2022타경50991	1	여수시 장성1길37, 304동 13층 1305호 [안산동,여수장성우미린아파트] 102.1465㎡	아파트	470,000,000 470,0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6843	1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산17 33521㎡	임야	46,929,400 46,929,400	분묘[납골묘3기]소재
2021타경7020	1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552-6 440㎡[공유자송영표326/682지분전부]	대	23,700,000 23,700,0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지상소재건물매각제외
		동소 1552-10 225㎡[공유자송영표326/682지분전부]	전		
2021타경54828	1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807-2 1428㎡[현황 일부잡종지,도로]	전	16,380,400 16,380,400	수목포함
	2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722-1 1458㎡[현황 일부대,도로.인접지지상건물이토지침범함,경계측량요]	전	20,995,200 20,995,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57971	1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 산176 14083㎡	임야	26,757,700 26,757,700	연고미상분묘소재,경계측량요
2022타경606	1	여수시 덕충안길94, 7층 730호 [덕충동,여수코아루오션파크] 31.1922㎡	근린시설	171,000,000 171,000,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자동차,중기]					
2022타경50335	1	사용본거지: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45번길31, 901호 [담덕기장센텀아파트] 등록번호:08라7449 차명:K5 연식:2019	자동차	20,000,000 20,000,000	보관:순천시서면압곡리568-1[순천자동차매매상사061-721-3900]
[기타]					
2021타경7020	2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1561-2 293㎡ 제시외 단층창고 26.6㎡[공유자송영표1/5지분전부]	창고용지	6,968,440 6,968,440	일괄매각.지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고흥군 대서면 귀산길 37-1 단층165㎡[공유자송영표1/5지분전부]	보관창고		
2022타경50397	1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7 202㎡[공유자황교인180/202지분전부]	전	4,207,570,000 4,207,570,000	일괄매각.목록1,2.지분매각.목록1~3농지취득자격증명요.단독주택부지조성사업승인득하였으나공사중단상태,수목및축대와콘크리트구조물포함,유치권주장자있음
		동소 10-4 29㎡[공유자황교인17/29지분전부]	답		
		동소 8-8 936㎡	답		
		동소 산228 595㎡	임야		
		동소 산223-5 33058㎡	임야		
		동소 133-3 275㎡	임야		
		동소 133-4 1748㎡	임야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22. 8. 8.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8. 16.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신영민